문화수도? … 광주, 문화기반시설 57개 전국 최하위 수준

국립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경기도·서울에 밀집

전남, 영화관 없는 시군 14곳 …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 자료

'문화수도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도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전체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4곳에 달해 여전히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문화기반시설은 지난 9월 현재 57개였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13개)와 울산시(40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이번에 지적된 문화기반시설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 말한다.

광주시는 국립도서관은 없고, 공공도서관 22개, 박물관 10개, 미술관 9개, 문예회관 7개, 지방문화원 5개, 문화의집 4개였다.

문화기반시설은 경기도(504개)와 서울(365개)에 밀집해 있었고, 그나마 전남은 191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문화기반시설이 많았다.

2017년 1월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 보유 상위 20개 시·군·구 가운데 수도권은 12개로 절반이 넘었지만, 문화기반시설 보유 수 하위 20개 시·군·구는 대부분 비수도권(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서울 종로구로 총 6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제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63개, 62개로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에는 여전히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많았다.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나주시를 비롯해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등 14곳에 영화관이 없다. 광주시 남구에도 영화관이 없다. 전남은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국적으로도 영화관이 없는 시군구가 66곳에 달해 지역별 문화 향유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에서도 격차를 드러냈다. 전남에 이어 경북(13개 시·군), 경남(7개 시·군) 순으로 영화관이 없었다.

송기석 의원은 "지방의 문화 소외현상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임에도 여전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대도시에 문화기반시설이 집중돼 있다"면서 "특히, 전남과 경북, 경남의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문화기반시설 상위 20개 지역

순위	시·군·구	합계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1	서울종로구	64	6	36	18	3	1	0
2	제주시	63	10	29	11	2	1	10
3	서귀포시	62	11	32	9	1	1	8
4	청주시	41	15	14	7	2	1	2
5	용인시	40	16	16	5	2	1	0
6	창원시	36	15	9	3	3	3	3
7	수원시	35	24	7	1	2	1	0
	고양시	35	17	10	3	3	1	1
	전주시	35	13	10	3	3	1	5
10	강릉시	33	4	22	2	2	1	2
11	파주시	32	14	11	5	1	1	0
12	영월군	30	2	24	2	1	1	0
13	안산시	26	13	4	6	2	1	0
	남양주시	26	11	11	2	0	1	1
15	천안시	26	10	8	2	3	3	0
16	서울강남구	25	11	10	3	0	1	0
17	서울중구	24	5	16	1	1	1	0
18	부천시	23	12	9	0	1	1	0
19	성남시	22	12	2	4	1	1	2
	화성시	22	13	3	1	2	1	2

〈출처 : 문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7. 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위해 5부 요인들과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문대통령 "적폐 청산은 司正 아닌 혁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野 정치 보복 반발 정면돌파 의지

5부요인들과 오찬 … "안보위기 내부 결속되면 충분히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 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다.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적폐 청산을 놓고 야권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아 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요인들과 오찬을 갖고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토로한 뒤. "현재의 안보상황에 국민과 함께 국가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차원에 더해서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 간의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민심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민생에 대한 큰 걱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행정부, 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정부 내외의 힘을 합친다면 이번 어려움도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 1000억 모은다던 농어촌상생기금 54억에 그쳐

FTA 피해보전 한다더니

박근혜 정부·재계 소극적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으로 연간 10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실적이 목표액의 5.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모금액은 서부발전 53억원, 한솔테크닉스 1억원,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등 모두 54억2350만원에 불과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으로 손해를 보는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재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도입이 무산됐다.

대신 그해 11월 한·중FTA 비준 당시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신설,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방식으로 매년 1000억원,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간기업 등의 자율기부방식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정부·농업계·기업계·공익계 대표 등 1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본부를 출범시켜 기금의 관리·운영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기금 운영본부는 지난 9월 현재까지 247개 회사를 대상으로 72회의 기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모금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한솔테크닉스 단 1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어 의원은 "FTA로 인해 수혜를 입는 산업이 농어업분야의 손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자는 공평의 관점에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시작하자마자 좌초될 위기"라며 "정부는 통상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출대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